



민주당,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7면

중국이
팔레스타인인의
친구일까?

12면

이스라엘 건국을
지지한 옛 소련

10~11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현실주의자가 아닌
권력 숭배자에
불과했던 키신저

6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업종
확대

13면

서이초 사건
재조사와
순직 인정을
하라

16, 15면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부상

그리고 본지 지지자의 참가 필요

민주당은 여전히 지지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이스라엘과 군사 교류를 늘려 왔다

김준호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가치 외교’(친미·친서방 외교의 코드명)의 일환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벌이는 전쟁 문제에서 되도록 미국과 보조를 맞추려는 듯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한국이 이번 학살에 직접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지 밝혀진 바가 없다. 중동산 석유에 의존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전쟁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한국 지배자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재래식 무기 생산력이 매우 높고, 이것이 미국의 무기 재고 운용에 상당한 도움이 됐던 바 있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155밀리미터 포탄 수십만 발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나토가 원한 공세 추진에 중요한 도움이 됐다.

기술 협력

한편, 한국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의 군사 교류를 꾸준히 늘려 왔다. 이 교류는 미군 무기 체계와 호환되면서도 독자적인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한국군의 핵심 목표와 긴밀하게 연결된 것들이었다.



9월 20일 네타냐후와 회담하는 윤석열

그 역사는 1993년 오슬로협정이 체결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이스라엘 무기 체계를 살필 목적으로 이스라엘에 방문했고, 1997년에는 당시 처음 총리가 됐던 네타냐후가 방한해 김영삼 정부와 통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이스라엘의 국영 군수기업 이스라엘항공산업(IAI)이 한국에 진출했으며, 양국 군수기업들이 레이더·드론·공대지미사일 등에 관한 군사 기

술 교류를 시작했다.

한국군 주력 전차 ‘K’ 시리즈 개량 사업에도 이스라엘군의 실전 데이터가 거듭 반영됐다.

이런 군사 기술 협력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한국 군수기업 한화시스템은 IAI와 함정 전투체계 수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4월에는 현대중공업이 IAI와 제휴해 자사 수출용 군함에 IAI의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하기로 했다.(더욱이 우려스럽게도 현대중공업의 이 군함은 남중

국해 영유권 분쟁의 일부인 필리핀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죽음의 상인’

다른 한편에서 한국은 대(對)이스라엘 무기 판매를 늘리고자 한다.

이스라엘은 첨단 군사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 즉시 전력 물자를 대량 생산할 제조업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포탄 등 발사 무기류를 수입해야 한다.

물론 그 압도 다수는 미국에서 온다. 하지만 한국 역시 발달된 무기 제조업을 이용해 이스라엘에 폭탄·수류탄·어뢰·지뢰·미사일·탄약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해서 무기를 대량 소모할 때마다 이를 판매량을 늘릴 기회로 삼아 왔다.

2008년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한 이듬해에 한국의 대(對)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전년도 대비 2배 늘었다. 2012·2014년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한 이듬해에도 한국의 무기 수출은 전년도 대비 각각 1.5배, 1.3배 늘었다.

10월 7일 이후 11월 26일까지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폭탄을 4만 톤 넘게 투하했다.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무기 퍼 주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

10월 7일 이후 미국의 대(對)이스라엘 군사 지원이 “통상적” 수준을 훨씬 넘어섰음은 잘 알려져 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11월 30일 현재까지 미국은 AH-64 헬기용 30밀리미터 기관포탄 3만 6000발, M141 로켓발사기용 로켓 1800발, 다수의 정밀유도탄·합동정밀 직격탄, 다수의 소구경 포탄, 155밀리미터 포탄 5만 7000여 발 등을 이스라엘에 제공했다.

미국 국방부는 10월 19일 성명을 발표해, 그 전주에 이미 첫 번째 추가 지원분이 이스라엘에 도착했고 그 이후로 “거의 매일” 미국 무기가 이스라엘에 도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19일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알아흘리 침례병원을 폭격한 직후다.

미국이 제공한 무기들은 대개 넓은 지역에서 인명을 살상하기 위한 것들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시리아·소말리아·리비아에서 이

무기들을 그렇게 사용했다. 가자 지구는 인구가 고도로 밀집된 곳이니 그 무기들의 살상력은 훨씬 배가됐다.

이밖에도 미국이 지원한 무기 중에는 수만 발의 벙커버스터,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이 포함돼 있다. 벙커버스터는 지하 시설(터널)을 타격해 그곳에 피신한 인명을 살상하는데 최적화된 무기다.

전투 지원

미국은 전투를 직접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늦어도 11월 초부터 미 공군은 가자 지구 상공에 드론(무인기)을 띄워 정찰 작전을 수행했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가 하마스 지도자·시설 공격에 이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말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 미국 정부 소식통들

차이 첩보가 “하마스의 인질 억류 외의 활동을 추적하는 데도 도움이 됐을 수 있다”고 시인했다(CNN).

미국의 다른 서방 동맹국들도 대(對)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늘리고 있다.

독일은 사민당 총리 올라프 솔츠가 “이스라엘의 안보는 독일의 국시”라며 이스라엘에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든 요청해 달라”고 밝힌 후, 특별 실무 기구까지 꾸려 이스라엘에 무기를 대량 수출하고 있다. 독일의 올해 대(對)이스라엘 무기 수출액은 3억 달러를 넘겨, 지난해의 10배에 이른다.

영국 역시 이스라엘 지원을 늘리고 있다. 12월 2일 영국 공군은 “가자 지구를 포함한 동지중해 상공의 감시 비행”을 위해 ‘새도 R1’ 정찰기 편대를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 비행 편대가 동지중해의 영국 공군 기지 ‘아크로티리’에 주둔 중인 미 공군과 합동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

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이 장기화될수록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군사 지원은 더 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무적이 아니고, 심각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은 이스라엘에 지원한 무기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원한 무기 목록을 거의 매주 공개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뚜렷이 대비된다.

이는 세계적으로 분출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음을 의식한 것이다. 11월 말 백악관은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대가 바이든을 “제노사이드 조(인종학살자 바이든)”라고 부르는 것을 콕 집어서 불평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더 커지고 급진화될수록 이스라엘과 이를 지원하는 서방 제국주의 동맹국들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만들어 낸 제국주의 시스템이 와해돼야 한다

이스라엘 국가와 그 국가를 지원하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두 핵심적 주장으로 자신의 행위를 뒷받침하는데, 그 둘 모두가 허물어지고 있다.

첫째, 지금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려면 오직 10월 7일의 사건만 보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런 주장에 따르면, 하마스의 공격은 오로지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살인 충동 때문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둘째,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학살이 유감스러운 일일지는 몰라도, 그 희생자들의 목숨은 죽은 이스라엘인들의 목숨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는 주장이다.

지난 두 달간의 저항이 남긴 최대 성과 하나는, 10월 7일에 벌어진 일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것이다.

10월 7일 공격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1948년에 벌어진 일을 알아야 한다. 즉, 식민 지배를 위한 인종차별적 폭력이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건국됐음을 알아야 한다.

75년 전 이스라엘이 100만 명 가까운 팔레스타인인을 살던 곳에서 내쫓으며 휘두른 살해·협박·폭력은 그저 먼 옛날 얘기가 아니다.

'나크바'라고 불리는 이 재앙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인들이 겪는 억압



팔레스타인인의 저항과 국제적인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이스라엘 국가와 그를 지지하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거짓 주장을 허물어뜨리고 있다

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지지하는 것은 새로운 것 없는 일이다. 서방 강대국들은 1948년 이스라엘에 중요한 지지를 보냈고, 1967년 이스라엘이 동(東)예루살렘과 서안·가자 지구를 점령했을 때도 그렇게 했다.

이는 서방 제국주의가 이스라엘을 중동에 있는 유용한 전초 기지로 여겼음을 뚜렷이 보여 준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지배계급들은 그런 역사를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 한다. 그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강렬한 반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인종 학살의 소명에 따라 1948년의 인종 청소를 거듭 되풀이해 왔다. 이는 식민 정착민 국가의 본성이다.

주류 언론들은 그런 큰 맥락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정말이지 노골적으로 인종 학살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가 전 세계에서 매우 커졌다.

거리 시위에 나온 사람들 대다수는 교전 중단과 휴전, 인질 교환 같은 작은 일들도 중요하지만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더 근본적인 전투가 있음을 알고 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간성과 생명을 경시하는 이스라엘과 그 지지자들의 두 번째 주장에도 도전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에서 스러지는 생명들은 “부수적 피해”가 아니다. 그 목숨들은 다른 모두의 목숨과 똑같이 소중하다. 그들의 죽음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그들의 주장이 허물어지자, 이스라엘 지지자들은 팔레스타인 지지가 곧 유대인 혐오라는 비방을 다시 꺼내 들어야만 했다. 이스라엘 지지자들이 자기가 밀린다 싶으면 꺼내 드는 전가의 보도다.

하지만 시온주의 반대는 유대인 혐오가 아니다.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해방을 외치는 것은 유대인을 몰살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아파르트헤이트[인종 분리 체제]를 끝장내고 민주적 단일 국가를 세우자는 외침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불평등·착취·억압에 맞서는 흐름의 핵심적 일부다.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들 모두가 팔레스타인 저항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 모두가 제국주의에 맞선 저항의 일부가 돼야 한다.

출처 Socialist Worker, 'Tear down the imperialist system that created Israel' (2023. 11. 28) / 번역 김준호

가자 지구 피란민이 말한다

“모든 것이 파괴됐습니다. 더는 감당이 안 돼요”

이번에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피란민 수는 1948년 '나크바'[아랍어로 '재앙'이라는 뜻, 이스라엘 건국 당시 벌어진 일을 가리킴] 당시 살던 곳에서 쫓겨난 85만 명보다 훨씬 많다.

가자 지구 인구의 약 80퍼센트에 이르는 170만 명 이상이 가자 지구 안에서 피란해 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팔레스타인인 5만 6000여 명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집을 잃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중 다수는 '나크바' 당시 이스라엘에 의해 살던 곳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후손이다.

이번 이스라엘의 학살은 한 달 넘게

지속됐다.

폭격이 잠깐씩 멈출 때면 팔레스타인인들은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돌아가 발견한 것은 이스라엘의 폭탄으로 가루가 돼 버린 집이었다. 오사마 알바스도 그렇게 가자시티 남부의 거주지로 돌아가봤다.

“뭐라도 남아 있을지, 뭐라도 건질 게 있을지 보려고 왔습니다. 빈손으로 도망쳐야 했거든요. 알바스는 자기 집이 있던 폐허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모두 파괴됐고, 모두 잃었어요. 이제 지쳤습니다. 이만하면 됐어요. 더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최대한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을 굶주리게 하고, 죽이고, 상처 입히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것은 학살만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삶을 유지하고, 생존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죄다 파괴하려고 한다.

드론으로 가자시티 남부의 심각한 파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

이스라엘은 알자흐라 지구의 가옥들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 알자티 난민촌의 경우, 이스라엘은 한때 9만 명이 살던 이 좁은 구역을 폭격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가옥을 파괴했다. 이렇게

동네가 완전히 파괴된 광경이 가자 지구의 거의 모든 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폭격으로 가자 지구 내 이슬람 사원 대부분이 손상됐고, 알리말 구역에 있는 라샤드 알샤와 문화센터 같은 공공 건물이 파괴됐다. 이스라엘 탱크는 심지어 나무들도 조준 포격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여가를 즐기던 곳도 파괴했다.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된다.

소피 스콰이어

출처 Sophie Squire, 'Israeli terror state itching to unleash more horrors on Gaza Strip — 'Everything is destroyed. We can't take it anymore,' displaced Gazans say' (2023. 11. 28) / 번역 김준호

이렇게 생각한다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부상과 본지 지지자의 참가 필요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려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몇 주째 거리로 나오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전례 없는 규모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이미 여러 나라의 권력자들에게 큰 곤란을 안겨주고 있다.

무엇보다, 서방 권력자들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서방 권력자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반(反)러시아 연대를 촉구하면서 '민족자결권' 수호를 내세웠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이스라엘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그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미국의 국제적 위신은 더한층 나빠졌다. 이번 전쟁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 미국이 입은 타격은 이미 상당하다.

중동 권력자들도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으로 난처한 상황이다. 그들은 말로라도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 "형제자매들"을 위한다고 해야 하는 처지다. 중동의 많은 나라에서는 정치 시위가 사실상 금지돼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는 그런 철권통치에 균열을 내고 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중동 권력자들의 약점이다.

2011년 아랍 혁명의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군부 독재 상태에 있는 이집트에서는 수년 만에 시위대가 타흐리르 광장에 모여서 "민중은 정권의 몰락을 원한다"는 이집트 혁명의 구호를 다시 외치기도 했다.

튀르키예에서도 시위대는 카메라 앞에서만 거칠게 말하는 대통령 에르도안에게 이스라엘과의 모든 군사적·경제적 협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전례 없는 규모로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 나라 권력자들이 수년간 이스

현재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청년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이들에게 팔레스타인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억압은 이 세계의 온갖 부조리와 불의를 대표한다.



운동 내 능동적인 이들과 관계를 맺고,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12월 2일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사람들' 집회

라엘 비판을 유대인 혐오로 몰고 범죄화하는 운동을 벌여 왔는데도 말이다.

특히 영국에서는 정부의 금지 방침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11월 11일 무려 8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그 결과 극우적인 내무장관(수엘라 브레버먼)을 해임케 하는 성과를 거뒀다. 야당인 노동당에서도 당 지도부의 이스라엘 지지에 상당한 반발이 일고 있다.

급진적

현재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청년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이들에게 팔레스타인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억압은 이 세계의 온갖 부조리와 불의를 대표한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식민 점령이 75년 이상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제국주의 열강이 그를 지원하고 수많은 국가들이 거기에 보조를 맞췄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근저에는 급진적 반(反)제국주의 잠재력이 있다.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은 이스라엘을 겨냥한 휴전 요구로 나타나기도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휴전을 거부하며 가자 지구에 어마어마한 죽음과 파괴를 몰고 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휴전 요구가 자칫 팔레스타인 측도 겨냥하게 될 수 있다는 점

을 유의해야 한다.

2006년 레바논의 이슬람 정당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을 격퇴시킨 바 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압도한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살아남음으로써 그럴 수 있었다. 이것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게릴라 전쟁의 논리다.

하마스도 살아남는 것이 곧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마스는 살아남을 공산이 크다. 네타냐후는 완전한 승리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하지만, 완전한 승리는 달성 불가능할 것이다.

설사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제거하는데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더 전투적인 저항 운동이 등장할 것이다.

가자 지구 주민들을 이집트 시나이 사막으로 몰아내려는 이스라엘의 전략은 인종 청소 프로젝트인 시온주의의 발로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신도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절박함의 산물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첨예한 상황에서 양측에 똑같이 휴전을 촉구하는 추상적인 평화주의는 운동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

〈노동자 연대〉신문은 휴전 요구를 넘어서 더 급진적인 요구를 제출해 왔다. 팔레스타인인의 무장 저항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 중단을 요구하고, 10월 7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대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운동 참가자들 다수의 정서와도 공명하는 것이다. 실제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동정을 넘어 그 저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급진적 경향이 운동 내에 상당히 존재한다.

특히, 아랍계나 무슬림 청년 사이에서 그런 급진화가 두드러진다. 그동안 주류 언론들에서 수동적 존재로 묘사됐던 무슬림 여성들이 시위의 선두에서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과 그들의 활동은 혁명적 좌파가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만큼 본지 지지자는 팔레스타인을 흔들림 없이 지지할 근거와 팔레스타인 독립을 이를 일관된 대안을 제시하며 운동 안의 능동적인 부분과 관계를 맺으려 해야 한다.

한편, 친이스라엘 세력의 반격에도 대비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반복되는 공격 패턴은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지지하는 것이 테러리즘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비판이 유대인 혐오라고 공격하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여기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그리고 유대인 혐오가 극우의 화두인 만큼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유대인 혐오에도 비타협적이어야 한다.

이번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은 길고 모질게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본지 지지자들도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참을성 있게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내외국인 협력 속에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확산되다

국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서울을 넘어 인천과 부산, 수원 등지로 확산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인종 청소 야욕을 쉽게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본 많은 활동가들이 교전 중지 기간에도 시위 확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재개한 12월 1일 인천에서, 다음 날인 토요일에는 서울 이스라엘 대사관 부근에서, 일요일에는 부산 서면과 수원에서 집회가 열렸다.

사흘 동안 벌어진 집회 모두 한국인과 한국 거주 팔레스타인 포함 아랍인들과 여러 국적의 유학생·이주민 등이 함께했다. 이런 협력은 전쟁 발발 나흘 만에 이스라엘 대사관을 겨냥해 열린 첫 집회 때(10월 11일)부터 이뤄졌고, 이후 서울이 아닌 다른 도시들에 있는 지인들을 서로 소개시켜 주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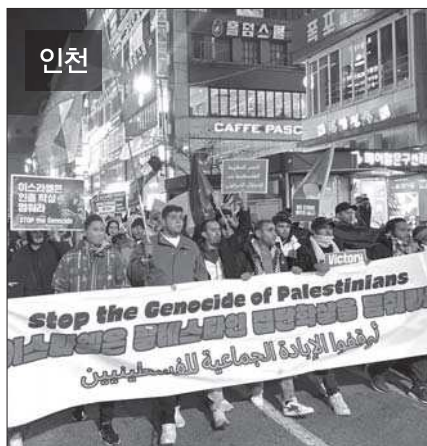
또한 이런 협력 덕분에 네 시위 모두에서 참가자들은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며 구호를 함께 외칠 수 있었다. 또한 아랍인 참가자들은 중동의 오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활력을 한국 시위에 제공했고, 행진에는 힘이 넘쳤다.

서로 멀리 떨어진 도시들이었음에도, 시위 참가자들이 본지에 소식을 전할 때마다 자신들을 지켜보던 행인들이 크게 호응했다고 입을 모아 말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본지 웹사이트에서 집회 소식들을 볼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이들은 12월 16일과 17일을 팔레스타인 연대 '집중 행동의 날'로 정했다.

12월 3일 부산에서는 200명을 훌쩍 넘는 참가자들이 모였는데 2주 전 첫 부산 집회 때보다 커진 것이다.

이날 발언한 이집트인 칼레드 씨는 이 운동이 세계적 운동의 일부이고 실



질적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몇 주 동안 세계 곳곳에서 수백만 명이 참가한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다시는 폭격하지 못할 때까지 우리의 연대는 계속돼야 합니다. 설령 다시 휴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의롭고 포괄적인 해결이 있을 때까지 우리의 연대는 계속돼야 합니다.”

부산 활동가들은 2주 뒤인 12월 17일 '집중 행동의 날'에는 더 넓은 지역에서 참가자들을 결집시키려 애쓰고 있다.

12월 1일 인천에서는 이집트인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조직해서 가자 출신 팔레스타인인 등 많은 아랍인이 참가했다. 그간 서울이 너무 멀어서 참가하기 어려웠던 인천 지역 아랍인들도

이날 집회에서는 아이와 함께 가족 단위로 참가할 수 있었다.

한국인 참가자도 전보다 많아졌다. 이곳에서 발언한 노동자연대 김영익 활동가도 연대를 계속 건설하자고 강조했다.

“얼마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쟁을 최소 두 달 이상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두 달 이상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해 기어아가자 바깥의 사망으로 내쫓아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팔레스타인 연대가 더 많이 성장한다면,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저항과 국제 연대 운동이 함께한다면 이스라엘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네 곳 집회에 모두 팔레스타인인이 참가했는데, 한국과 팔레스타인이 멀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중 서울 집회에서 발언한 팔레스타인 유학생 나리만 씨는 이스라엘을 사실상 비

호하는 한국 정부에도 일침을 놓았다.

“당신들은 일제 식민 지배로 고통받은 역사가 있는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팔레스타인인들을 인종 청소하는 이스라엘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12월 2일 서울 집회에서는 한국인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각자의 대학에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팔레스타인 문제를 알리는 중이라고 발언했다. 또, 그렇게 만난 학생들이 이날 집회에도 함께했다고 전해 큰 박수를 받았다.

12월 3일 수원 집회에서는 한 교사가 팔레스타인 문제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동료 교사들과 팔레스타인 지지 인증샷을 찍고 있고, 학생들과도 토의 수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12월 16일 '집중 행동의 날'까지 저마다 더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힘쓰자고 결의했다.

한국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세계적 연대 운동의 일부이다. 빠르게 부상한 연대 운동과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은 이미 이스라엘과 미국을 상당히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이스라엘의 패배를 앞당기기 위해, 그럼으로써 더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자.

김종환

해외 시위 소식을 다룬 기사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시온주의자들은 청년 세대를 잃었다"'는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wspaper.org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상황,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소식, 시위 일정 등 더 많은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현 팔레스타인 저항의 쟁점들을 다룬

노동자연대 TV 영상 모음

온라인 토론회 영상,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현장 영상들을 만나 보세요!



bit.ly/477esMy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아는 데 도움이 될 책

강탈국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강탈의 역사

존 로즈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184쪽, 9,000원

팔레스타인의 저항 - 이스라엘과 제국주의에 맞서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필립 마플릿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440쪽, 20,000원

팔레스타인 비극사 - 1948, 이스라엘의 탄생과 종족청소

일란 파페 지음, 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568쪽, 25,000원 (절판)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 - 정착민 식민주의와 저항의 역사, 1917-2017

라시드 할라디 지음, 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448쪽, 25,000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현실주의자가 아닌 권력 숭배자에 불과했던 키신저

헨리 키신저의 죽음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 군사력을 무자비하게 사용해서 방 제국주의를 지키려는 자들 사이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반응이다. 영국 노동당 전 대표 토니 블레어나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의 반응이 그런 사례다. 그들은 키신저의 지혜를 칭송하며 키신저를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찬양했다.

그러나 세계의 나머지 사람들은 키신저를 전범이라고 비난했다. 물론 이것이 옳은 반응이다. 그러나 키신저가 베트남, 캄보디아, 칠레, 아르헨티나, 동티모르 등지에서 벌인 수많은 악명 높은 범죄들에도 불구하고 어쩌서 계속 존경받는 유명한 대접을 받았는지는 던져 볼 만한 물음이다. 그것은 그 높은 과물이 스스로를 잘 홍보한 결과다.

《뉴 스테이지먼트》에 실린 벤 주다의 기사가 이 점을 탁월하게 지적했다. 원래 그 기사는 지난 5월 키신저의 100세 생일을 기해 쓴 것이다. 주다는 키신저가 공직에서 물러난 시점이 1977년 1월, 그러니까 무려 46년 전임을 지적한다. 그러나 “언론을 다루는 능숙한 솜씨로 키신저는 스스로를 브랜드로 만들고, 그 브랜드로 ‘키신저 협회’라는 고수의 국제 컨설팅 기업을 설립했다.”

주다는 키신저가 깊은 통찰을 주기 보다는 “뻔한 얘기나 하는 인터뷰를 전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문으로 했다”고 지적한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거나 ‘러시아가 보복을 꾀한다’는 뻔한 얘기를 마치 예언자스러운 위엄을 띠고 늘어놓았다. 그런 다음 독자들의 시야 바깥에 있는 18세기 후반 역사를 곁들였다. 오스트리아의 정치가 메테르니히를 슬쩍 언급하는 식이다. 그 결과물은 별로 특별한 게 없는 맹탕이다.

맹탕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었다. 지난 세월 동안 키신저가 발휘한 재능은 그런 싱거운 소리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이는 능력에 있었다. 키신저는 고객이나 후원자, 핵심 권력층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바를 정확히 말하는 재능이 있었다.” 기업주



서방 제국주의가 사랑한 전쟁 범죄자 헨리 키신저

들이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은 많은 경우 그들의 분석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주다는 지적한다.

나는 주다가 키신저를 부정적으로 그리면서도 그를 그의 민주당 측 경쟁자이자 1977~1981년 지미 카터 정부의 안보 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와 대비시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브레진스키는 미국 제국주의의 세계적 우위를 유지한다는 목표를 숨기지 않고 거기에 인생을 바쳤다. 그 목표를 위해 브레진스키는 이슬람주의 게릴라를 지원해 1979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에 맞서게 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그 정책은 알카에다와 탈레반의 부상을 낳았다. 극악한 수단만이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다가 정확하게 꼬집었듯이 키신저는 독자적인 사상가라기보다는 권력의 숭배자였다. 역사가 그렉 그랜던도 《키신저의 그림자》(2015)에서 이러한 평가를 예고한 바 있다. 그랜던은 키신저가 흔한 주장과 달리 현실주의의 신조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현실주의에 따르면 국가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필요한 경우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현실주의는 국가의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그에 따른 제약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한스 모겐소, 케네스 월츠, 존 미어샤이머 같은 주요 현실주의자들은 아마도 그런 신조에 따라 미국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는 것일 테다.

반면 키신저는, 우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은 없다고 하버드대 학생 시절 때부터 줄곧 주장했다. 1963년 키신저는 이렇게 썼다. “두 종류의 현실주의자들이 있다. 사실을 주무르는 현실주의자들과 사실을 만들어내는 현실주의자들이다. 서방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의 현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이다.”

키신저는 경력을 쌓는 내내 “자기 나름의 현실을 만들어” 내려 했다. 키신저는 인상을 조작함으로써 출세했다. 처음에는 냉전의 절정기에 정책 지식인으로서, 그후 1967~1977년에는 닉슨 정부와 포드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는 인도차이나 맹목격을 지시해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다. 현실이 아닌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1969년 당시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 골이 키신저에게 물었다. “왜 베트남에서 빠져나오지 않으십니까?” 키신저는 이렇게 답했다. “갑작스럽게 빠져나오면 미국이 신뢰성 문제를 겪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1972년 4월 키신저는 소련 지도자 레오니드 브레즈네프에게 베트남 전쟁에서 빠져나올 방안을 시사했다. “베트남에서 평화 합의가 이뤄진다면 [미국은 — 캘리니코스] 베트남인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 선뜻 동의해 줄 것입니다. … 일정 시간, 예컨대 18개월 후에 말입니다.”

실제로 사이공이 함락된 것은 1975년 4월이었다. 미군 철수를 가능케 한 북베트남과의 평화협정이 체결된 지 2년 반이 지나고 나서였다. 그러는 동안 미국의 “신뢰성”을 구제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희생됐다.

번역 이원웅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aper
wspaper.org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창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간) (주)엠코리아 현채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48

더불어민주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시험대를 통과 못 할 것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아직껏 이스라엘 규탄을 회피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관해 밝힌 입장은 오히려 “하마스 규탄”뿐이다.

사실 민주당이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 등을 못 본 체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증진시켜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스라엘의 가자 폭격이 한창이던 2021년 5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당시 국제적 비난 여론에 직면해 있던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 준 셈이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본지 지난호에 실린 다음 기사를 참조하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하지 않나’)

한미동맹

우파 정부뿐 아니라 민주당 정부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세계 전략에 보조를 맞췄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년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중동에서 벌인 전쟁들에 미국을 지지하며 참전했다.

김대중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와 레바논에 파병했다. 두 파병 모두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였다.

두 민주당 정부는 미국의 압력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게 아니라 의식적 선택을 했다. 그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이롭다는 한국 지배계급의 일반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2022년 2월~) 초기부터 미국이 주도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인도주의’ 미명하에 우크라이나에 군수 물자를 지원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터놓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익답게) 더한층 노골화하며 제국주의간 갈등의 각축장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갔다. 민주당은 집권 시절 우크라이나 지원 전력 때문에 한결같은 반대를 하지 않았다.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반대한다는



노무현은 윤창호 병장, 김선일 씨 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부시의 점령을 돕고 파병을 강행했다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제재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균형 외교”라는 게 실은 미국 눈치보기일 뿐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한편, 지난 3월 윤석열은 미국의 촉구와 지지를 받으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짓밟는 ‘제3자 해법’에 일본 총리 기시다와 합의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강제동원 합의 직후 한밤중에 신속하게 입장을 발표해 극찬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이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을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의 “굴욕” 외교를 비판하며 합의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 비판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측의 요구를 너무 많이 들어줬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미국·일본과의 군사동맹 관계 자체는 결코 문제 삼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한일 합의 배후에 미국의 후원과 축구가 있다는 점은 일절 비판하지 않았다. 한미동맹이 한국의 “국익”(실은 지배계급의 이익)에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가

많이 포진돼 있었다. 그중에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으로서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을 책임졌던 이종석도 있었다.

그 때문에 “한미동맹” 강화의 최신 귀결인 “한미일 동맹”을 위해서는 한일 과거사 문제를 더는 끌어서는 안 된다는 우파의 입장에 전혀 맞서려 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제국주의

오늘날 한국 자본주의가 미·중 사이에 끼어 있다는 처지를 의식해, 한국 지배계급의 차선책을 대표하는 민주당은 두 제국주의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할지를 두고 고심한다.

민주당의 외교·안보 이데올로그들은 우파의 한미동맹 일변도 외교는 “국익”을 해친다고 비판하며 “균형 외교”를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강한 한미동맹의 유지’와 ‘미·중 간 균형 잡기’가 결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하면 할수록 더욱 심각한 모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야당의 처지에서 벗어나 집

권했을 때 민주당 정부의 실천은 실제로는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곤 했다. 미국은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해졌지만) 여전히 최강 강대국이고, 한미동맹은 한국 지배계급이 태생부터 중시해 온 동맹이기 때문이다.

가령 문재인은 야당 시절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집권하자 몇 개월 만에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현재 이재명 대표도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제국주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에 도전하기보다는 번번이 줄타기 또는 편승하기를 택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이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한국 지배계급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은 우파와 달리 당내 개혁파를 통해 사회 운동의 진보 포퓰리즘 경향을 포섭하는 전략을 추구해 왔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한국 국가와 자본주의의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고, 어떻게든 한국 지배계급의 낙점을 받으려 애쓰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제국주의는 그저 한 다발의 정책이나 특정 국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강대국 간의 서열 경쟁이 빚어내는 세계 시스템이다. 그 경쟁의 끝없는 추동력은 자본 축적 자체에서 나온다.

따라서 제국주의 체제의 역학과 압력이 온존하는 이상 윤석열이 받는 것과 똑같은 자극과 제약을 민주당이 받고, 특히 집권했을 때의 실천은 크게 다르지 않곤 한다.

이러한 점을 간파하고 민주당을 제국주의 반대 운동으로 견인하겠다는 것은 몽상이다.

김승주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 COP28, 화석연료 정상회의

1987~1993년 제1차 인티파다

— 팔레스타인인들이 들고일어났을 때

1987년에 시작된 제1차 인티파다는 매우 강력한 아래로부터의 반란이었으며 이스라엘 국가를 뒤흔들고 시온주의에 맞서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소피 스콰이어가 《팔레스타인의 저항》(책갈피)의 저자 필립 마플릿에게 그 의미에 대해 들어본다.

제1차 인티파다는 어떤 사건이었나요?

제1차 인티파다는 1987년 12월에 시작돼 거의 6년간 지속됐습니다.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까지 집집마다 이 항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반란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팔레스타인 사회의 모든 층이 참여한 매우 민주적인 아래로부터의 반란이었어요. 인티파다 동안 여성들의 자치 조직이 만개하기도 했죠.

파업은 저항의 중요한 일부가 됐습니다. 점령지 노동자들이 여러 날 동안 일터에 나가기를 거부했죠. 다급해진 이스라엘 사용자들은 호텔과 식당을 운영하고 열매를 수확할 노동력을 새로 구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해야 했죠.

제1차 인티파다의 에너지와 활력은 팔레스타인인들이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아닌 대안적 지도부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항쟁은 처음에 이스라엘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팔레스타인 차량들을 덮쳐 여러 명을 죽인 일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세 명이 가자 지구 자발리아 난민촌 사람이었어요. 반란은 그곳, 바로 자발리아 난민촌에서 단단한 뿌리를 내린 후 가자 지구 전역, 그 다음에는 서안 지구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지 단 이틀 만



새 세대 팔레스타인 청년이 이끈 제1차 인티파다

에 항의 행동의 결과로 가자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한 국제 구호 단체 직원은 가자가 “완전히 문을 닫았다”고 했죠.

“도로는 봉쇄됐고 거리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고 불타는 타이어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가 도시를 휘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항쟁을 이끈 것은 새 세대 팔레스타인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돌맹이를 던지며 저항했습니다. 이 새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국가가 가한 모욕과 가난, 폭력만을 경험하며 자란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그런 상황을 바꿀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항할 태세가 돼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일간지 《예루살렘 포스트》의 한 기사가 그 시기의 광경을 단적으로 포착한 바 있는데요, 그 기사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이스라엘의) 스무 살 젊은이들이 저들(팔레스타인의) 스무 살 젊은이들과 싸우고 있다. 우리 편은 장갑차와 헬리콥터를 동원하고 저들은 몽둥이와 돌맹이, 원시적인 화염병을 쓴다.”

제1차 인티파다가 벌어진 맥락은 무엇이고, 새로운 활동가들이 그 맥락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식민 지배에 저항한 오랜 전통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시온주의자들과 영국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 전투를 벌였던 1936~1939년 항쟁의 물결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극심한 폭력으로 이 저항은 진압됐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은 결코 이 투쟁을 잊지 않았

습니다. 그들에게 이 시기는 그 자체로 또 다른 인티파다입니다.

그러나 1987년에 팔레스타인인들이 항쟁에 나선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잔혹함과 폭압 때문만이 아닙니다. 경제적 압박과 가난이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1967년 ‘6일 전쟁’ 이후 이스라엘은 20년 넘게 가자 지구를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가자 지구를 사실상 반투스탄으로 만들었습니다. 반투스탄이란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공 지배자들이 설정한 흑인 분리 거주 지역을 말합니다. 가자 지구도 그런 곳과 비슷하게 만든 거죠.

가자 지구에 거주하는 노동자 수천 명이 이스라엘에서 일했는데, 이스라엘은 이들을 값싸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여겼습니다. 1981년에는 팔레스타인 사람 11만 명이 점령지와 이스라엘을 오가며 일하고 있었어요.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의 실업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주 손쉽게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부려 먹을 수 있었습니다.

1987년에 이스라엘 노동자의 임금은 팔레스타인 노동자보다 10배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운 억압적 체제 하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이런 억압적 점령 체제에 대한 분노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반란이 퍼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의 맹렬하고 완강한 저항은 이스라엘 국가를 뿌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인티파다를 진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1948년 ‘나크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수십만 명이 살던 곳에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쫓겨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레바논이나 요르단 같은 이웃 나라에 정착했는데, 거기서 그들은 PLO 등 자신의 저항 기구들을 조직합니다.

1982년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침공해 당시 레바논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운 PLO를 분쇄하려 했습니다. 침공 동안 이스라엘의 동맹 세력인 레바논의 카테브[기독교 우익 파시스트 운동]는 수도 베이루트에서 팔레스타인인 2000명을 학살했어요. 이스라엘은 자신이 팔레스타인 민족해방 운동을 진압했다고 믿었죠. 그러나 그들은 틀렸습니다.

운동은 치명타를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운동은 팔레스타인 내의 대중 저항이라는 형태로 변모했습니다. PLO 같은 저항 조직들이 이스라엘에 맞서 1960년대 내내 벌인 게릴라 투쟁은 영웅적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87년 인티파다에 나선 수많은 팔레스타인 청년은 자신이 새로운 방법으로 싸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경험이 청년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게릴라 전사들과의 싸움에만 익숙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파업과 대중 시위를 망라하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아래로부터의 민간 대중 운동에 대비가 돼 있



서안, 울처마 Sheir



2000년 가자 지구에 진입한 이스라엘군 탱크에 맞서 맨몸으로 돌을 던지는 소년

지 않았습다. 반란이 시작되고 1년 후 당시 이스라엘 부참모장 에후드 바라크는 인티파다가 이스라엘 국가의 진을 빼놓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1만 명 규모의 이스라엘 병력이 서안과 가자 지구에 배치됐고 인티파다를 진압하는 데 350만 일의 노동 시간이 “투자”됐다고 털어놓았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탄압으로 저항을 깨부수려 했습니다. 인티파타 동안 3만 명에 가까운 팔레스타인인들을 투옥했어요. 당시 국방장관 이츠하크 라빈은 자신이 “철권통치”라고 부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은 1985년에 팔레스타인 민족 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시행됐던 것이고, 팔레스타인인을 강제 추방하는 조치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4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철권’ 정책을 대대적으로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인티파다를 결코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항쟁에서 배워야 할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저항의 불꽃이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제1차 인티파다 때 억압과 폭력에 맞서 들고일어났듯이, 지금 이스라엘의 만행은 이후 더 큰 반란을 낳을 것입니다.

제1차 인티파다는 어떻게 끝났나요?

결국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야만적 탄압을 당해 내지 못했고, 거의 6년이 지난 후에는 버틸 힘이 남아 있지 않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거대한 저항을 끝내기 위해 PLO 지도부에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야세르 아라파트 등 PLO 내의 파타당 지도자들은 분출한 운동을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독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를 자신들에게 넘겨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오슬로 협정으로 알려진 이른바 ‘평화 협상’에 참여하게 되죠. 대중 운동은 1993년 9월에 끝났고 그 뒤에 이어진 ‘평화 프로세스’는 결국 거짓과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평화 협상은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건설하고 가자 지구를 감옥 같은 곳으로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협상 결과,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 대한 부분적 통제권을 갖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협상이 사기임을 깨닫고 PLO와 아라파트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였죠. 2006년 자유롭게 치러진 총선에서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파타가

우리가 이 항쟁에서 배워야 할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저항의 불꽃이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닌 하마스를 찍었습니다. 애초 이스라엘은 세속적인 PLO의 대항마로 하마스 같은 이슬람주의 단체의 성장을 북돋으려 했어요.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모스크 설립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마스가 초기에 학교와 어린이집에 자금을 지원하고 자선 사업을 벌이는 등의 복지 제공에 기반한 조직이었을 때 이스라엘은 이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러나 이게 계속되지는 못했죠. 하마스가 PLO의 균형추 구실에만 머무르지 않았던 거죠. 오늘날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제1차 인티파다가 다른 곳의 반란을 고무했나요?

인티파타는 레바논, 요르단, 북아프리카, 걸프 국가 등 아랍 세계 전역의 대중 운동을 고무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성격이 중요했습니다. 투쟁에 나선 아랍 세계의 대중은 이것이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임을 이해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단지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표하려고 시위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국 정부에도 맞서 싸웠던 것이죠.

이집트에서 벌어진 시위가 한 사례인데요, 이집트에서는 대학 캠퍼스에서 대중 시위가 일어나고 마할라 지역의 섬유 공장 노동자들이 거기에 동참했어요. 노동자들은 일손을 놓고 인티파다 지지 행진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이집트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에 반대하는 구호도 제기했습니다.

자국 통치자에 맞서게 되면서 연대 시위는 그 통치자들에게 아주 위험한 것이 됐어요. 그래서 아랍 국가들은 연대 운동을 진압하려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는, 아랍 정권들의 냉혹한 위선을 뚜렷하게 보여 주는 하나의 패

턴을 볼 수 있죠. 한편,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에 일체감을 갖는 세계 도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점령하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대중 운동을 보면서, 사회에서 가장 억압받는 집단조차 저항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직도 싸우고 있고 전 세계에서 투쟁을 고무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온갖 후원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집단적 저항 의지를 꺾지 못한 것이죠.

팔레스타인 밖 아랍 지배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제1차 인티파다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에서 큰 저항 운동이 벌어지면 아랍 지배계급은 항상 불안해 했어요. 그 저항이 자국의 대중적 저항으로 번질 때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랍 통치자들을 구해 준 것이 바로 PLO였어요. 1960년대에 야세르 아라파트[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초대 수반]는 다른 아랍 국가들의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아라파트는 아랍 통치자들에게서 돈과 무기를 받는 대가로 PLO가 그들의 국내 정책에 간섭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에 고무돼 투쟁에 나선 다른 아랍 국가 대중에게 PLO가 보낸 메시지는 ‘집으로 돌아가라, 일터로 복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더 광범한 아랍 노동계급의 투쟁과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은 언제나 아랍 지역 전역에서 연대 운동을 촉발했지만 팔레스타인 운동 지도자들, 특히 PLO는 이것이 팔레스타인 해방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결코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언제나 팔레스타인 민족 운동, 더 광범하게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을 고립시켰습니다. 투쟁이 승리하려면 이런 전략을 반드시 거부해야 합니다. 언제나 팔레스타인 운동은 아랍 노동계급과 함께 싸울 때 가장 강력합니다.

옛 소련도 이스라엘 건국을 지지했다

김인식

누가 1947년에 이스라엘 건국을 지원했을까? 흔히 미국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소련도 이스라엘 건국을 지원했다.

1947년 유엔은 결의안 181호를 채택했다. 유엔 결의는 중동 통제를 둘러싼 열강 간 거래의 산물이었다. 그 거래 과정에서 스탈린이 통치하던 소련이 뜻밖에도 시온주의자들의 동맹으로 등장했다.

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에서 소련 상임대표 안드레이 그로미코가 한 연설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단일한 아랍-유대인 국가의 수립] 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나면 유대인과 아랍인의 관계 악화를 고려해 … 한편에는 유대 국가가 다른 한편에는 아랍 국가가 있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국가로 팔레스타인을 분할하는 것을 허용한다.”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이 결의안이 채택된 뒤 몇 달 동안 아랍 산유국 정부들과의 관계가 위태로워질까 봐 조심했다.

그러는 사이에 소련은 시온주의자들을 외교적·군사적으로 전폭 지지했다. 유엔 주재 초대 이스라엘 대사를 지낸 아바 에반은 그 시절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다. “[소련이] 미국보다 더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했다.”

시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인 인종 청소에 착수하자 소련은 그들에게 군사



1949년 5월 1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노동절 행사에 등장한 스탈린 초상화

적 지원을 제공했다. 스탈린은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한 무기 공급을 명령했다. 그 무기들이 시온주의 무장 조직인 하가나를 무장시켰다. 하가나는 그 뒤 이스라엘 방위군(정규군)의 주력이 됐다.

1948년 5월 14일 다비드 벤구리온(이스라엘 초대 총리)이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자 소련은 그 사흘 뒤에 이스라엘 국가를 최초로 법적으로 승인했다.

주변 아랍국들이 독자적인 유대인 국가의 수립을 반대해 군사적으로 개입하자, 소련은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한 무기 제공을 늘렸다. 심지어 제2차세계대전 말에 노획한 독일 비행기들을 시온주의자들에게 보냈다.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소련의 당시 위성국인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훈련을 받았다.

소련이 제공한 무기들은 이스라엘에

결정적 도움이 됐다. 벤구리온은 이렇게 말했다. “장담하건대 체코슬로바키아가 무기를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 달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골다 메이어(1969~1974년 이스라엘 총리)도 이렇게 회상했다. “첫 여섯 주 동안 우리는 하가나가 동유럽에서 구매한 포탄·기관총·총알에 절대적으로 의지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겪은 비극적 인종 청소도 스탈린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했다.

1948년 12월 소련은 동유럽 위성국들과 함께 유엔 결의안 194호에 반대표를 던졌다. “고향으로 돌아가 이웃들과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은 허용돼야 한다”는 결의안이었다.

스탈린은 왜 시온주의자들을 지원했나?

1947~1948년 미국·소련·시온주의자들은 각각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 이스라엘 건국 지지 동맹을 맺었다.

1947년 지중해·중동·그리스·터키·이란 등지에서 미·소 제국주의 양국의 전후 영향력 재편 투쟁(냉전)이 시작됐다.

미국은 석유 매장량이 풍부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동에서 영국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다.(영국은 여전히 이라크·트랜스요르단·이집트의 군주들을 자국의 영향권 하에 두고 있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강화했다.

소련은 유대인 국가가 영국을 팔레스타인 밖으로 쫓아낼 유용한 지렛대가 될 거라고 봤다.

스탈린은 요르단강 서안 지역과 시나이 반도를 포함하는 “대(大)이스라엘”을 원하는 유대인을 이용해 영국에 맞서는 한편, 소련의 중동 거점을 마련하고 싶어 했다.

당시 소련 외무장관(1차: 1939~1949년) 바체슬라프 몰로토프가 이 계획을 적극 대변했다. 몰로토프는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 체결에도 앞장섰던 자였다.

몰로토프는 소련이 아랍 공산당 지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기력한 아랍 공산당이 아니라 시온주의자들을 지지해야 영국 제국의 옛 중동 식민지 중 큰 덩어리를 잘라먹을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스탈린의 중동 정책은 마르크스주의와 아무 관련이 없었다. 스탈린은

오로지 소련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현실 정치”(근시안적 의미)에 충실했을 따름이다.

1920년 코민테른 2차 대회에서 채택된 ‘식민지와 민족 문제에 관한 결의안’과 비교해 봐도 이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피억압 민족의 노동계급 대중은 계속 희생돼야 한다는 거짓말, 연합국과 그 국가의 부르주아지에게 커다란 자산이 되는 거짓말을 보여 주는 사례가 있다. 그것은 팔레스타인의 시온주의자들이 독립적인 유대인 국가를 수립한다는 명목으로 영국의 멍에에 매어 있는 팔레스타인의 노동계급 사람들과 아랍인들을 억압하는 것이다. 그곳에서 유대인은 여전히 소수다.”

스탈린과 시온주의자들의 밀월이 깨지다

스탈린의 팔레스타인 구상은 결국 허된 꿈이 됐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냉전의 필요에 부합된다고 판단했다.

이제 미국의 중동·동지중해 정책은 이스라엘에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쏟아부어 이스라엘을 자국의 영향권 하에 두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스라엘 국가도 이내 미국과의 경제적·군사적·정치적 관계를 발전시켰다.

골다 메이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유대계 미국인에게서 받은 돈으로 소련제 무기를 구매할 수는 없다.”

사실, 차임 바이츠만과 벤구리온 등이 소련 지배 관료에 지원을 요청했던 제2차세계대전 동안에도 시온주의 지도자들은 이미 서방에 친화감을 느꼈다.

계산적

런던 주재 소련 대사(1934~1943년)를 지낸 이반 마이스키가 1943년 귀국 도중에 팔레스타인을 방문해 시온주의 지도자들을 만났다. 마이스키는 몰로토프에게 이 만남을 보고했다.

“그들은 매우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러시아의 대학들이나 김나지움을 졸업했습니다. 우리는 고전 문학과 러시아어를 말했지만, 그들은 미국식 영어로 생각합니다.”

1차 중동 전쟁(1948~1949년)이 끝난 뒤 시온주의자들은 미국 중시 외교로 확실하게 선회했다.

시온주의자들은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소련의 지원을 얻어 내기 위해 매우 계산적으로 행동했던 것이다.

소련과 시온주의자들의 밀월은 끝났다. 그제서야 스탈린의 대(對) 이스라엘 정책도 비판적으로 바뀌었다.

스탈린이 시온주의를 지지한 대가를 치른 아랍 공산당

1947~1949년 스탈린이 시온주의자들을 지원한 결과는 팔레스타인인 대량 학살과 강제 이주, 아랍 좌파의 위기였다.

당시 아랍 지역에는 제국주의와 억압적인 아랍 정권에 대항할 잠재력을 가진 세력이 있었다. 노동자·농민·청년이 투쟁했다.

가령 1948년 1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알 와트바(“도약”) 봉기가 일어났다. 이라크 국왕이 1930년에 체결한 영국-이라크 협약을 연장하려 하자 항의 운동이 분출한 것이대(이 협약에 따라 이라크는 영국의 피보호국이 됐다). 노동자·학생·도시빈민이 투쟁에 참가했다.

이라크 공산당은 (국왕에 맞서 민족 부르주아지와 전략적으로 동맹해야 한다는 인민전선 노선을 따르면서) 대부분의 시위를 조직했다.

그러나 5월에 1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자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알 와트바 봉기를 진압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스탈린은 1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했다. 스탈린은 ‘제국주의와의 투쟁’이 오직 위로부터만 올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아랍 군주들이 영국 제국주의의 대리인이었다면 소련은 이스라엘 국가를 지원해 대항해야 한다는 식이었다. 이스라엘 국가가 팔레스타인인의 피로 건설될지라도 말이다.

그로미코는 유엔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유대인의 홀로코스트를

들먹이며 이런 상황을 합리화했다.

“유대인은 많은 역사 기간에 팔레스타인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전쟁[제2차세계대전]으로 인해 유대인 인민은 다른 인민보다 훨씬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치 사형집행인들에 의해 비명횡사한 유대인 수는 어렵잡아 6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은 자신의 국가를 수립하려고 힘쓰고 있고, 그런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로미코의 연설은 역겨운 위선이다. 1930년대 스탈린이 지도한 소련 국가자본주의의 특징 하나는 유대인 혐오였다.

알 와트바 봉기

그로미코가 유엔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찬성하는 연설을 하자,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서 군중이 공산당 지구당사로 몰려가 항의했다.

팔레스타인 공산당은 그 안에 아랍계 당원과 유대계 당원이 함께 있었고 단일 국가 방안을 지지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공산당이 친소 정당이었기 때문에 지지가 크게 줄었다.

전통적으로 대중 운동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이집트·레바논 등지의 공산당들도 영향력이 감소했다.

그러나 스탈린이 보기에 아랍 공산당들의 위기쯤은 소련의 중동 존재감을 보장하는 비용으로 치를 만한 대가였다.

그런데 스탈린은 과거에 종종 그랬듯이 180도 입장을 바꿨다. 1949년 스탈린은 시온주의 지지 입장에서 노골적인 유대인 혐오 입장으로 선회했다.

1953년 죽을 때까지 스탈린은 유대인 혐오 히스테리를 부추겼다. 가령 1952년 7월 스탈린은 제2차세계대전 동안 정부가 지원해 창설된 반파시스트 유대인 위원회 위원 20명을 반정부 스파이 활동 혐의로 처형했다.

유대인을 차별하고 탄압하는 스탈린의 정책에 환멸을 느낀 소련의 많은 유대인들이 시온주의로 넘어갔다. 스탈린의 유대인 혐오 정책을 시온주의를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강화시켰다.



11월 29일 이집트 카이로 언론노조회관 앞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대선 앞두고 탄압 강화하는 이집트 정권

일각에서 평화 중재자로 칭송받는 이집트 대통령 압델 파타 엘시시는 선거 부정이 예상되는 12월 10일 대선을 앞두고 반대파를 탄압하고 있다.

10월 1일 이래 이집트 정부 당국은 최소한 196명을 “무허가 시위” 참가, 테러리즘,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체포해 신문했다.

당국은 이집트 야당 정치인들과,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아메드 탄타위와 그의 선거 운동원들도 체포했다.

탄타위는 진정한 엘시시 반대자로서 선거 운동을 벌이려 했지만, 대선 출마 자체를 저지당했다.

탄타위와 그의 선거 운동 참모 무함마드 아부 알다야르, 탄타위 지지자 21명의 재판이 11월 28일로 잡혔다.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는 성명서를 발표해 탄압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 저항 지지를 다시 표명했다. 지난주 단체 웹사이트에 공개된 그 성명서는 이렇게 주장했다. “팔레스타인 저항은 교전 일시 중단을 강제해 시온주의

세력의 궤대를 꺾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하기로 손꼽히는 군대와 정보기관이 가자 지구 사람들과 가자 저항 세력들의 전설적인 끈질김에 직면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가자의 저항 세력들은 전 세계 자유 민중에게 영웅적 행동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RS는 엘시시 정권이 “경제 교류를 잠시 중단하거나 이스라엘 대사를 추방하는 식으로라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흔들지” 않는 것을 규탄했다.

이어서 RS는 팔레스타인 저항에 대한 지지를 밝히며 이렇게 지적했다. “저항 세력의 무기만으로는 온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 없을 것이다.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전 세계 수도를 가득 메운 전례 없는 연대 운동을 더 확대하고, 각국 정부가 시온주의 세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출처 Socialist Worker, 'Egyptian Regime clamps down ahead of election' (2023. 11. 28) / 번역 김준호



“이스라엘 - 소련 형제에 만세”(1949년 포스터)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중국

팔레스타인인을 동정하는 듯해도
저항은 지지하지 않는다

김영익

11월 21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주민을 상대로 한 “집단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중국 등 브릭스 정상들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중국의 이런 입장은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일방으로 두둔하는 서방과는 달라 보인다.

그러나 중국도 국내에서 노동자와 농민을 착취하고 대다수가 무슬림인 위구르족을 억압하는 자본주의·제국주의 국가이다. 중국 지배계급은 그런 자신의 고유한 이해관계에 따라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오늘날 중국은 중동에서 중요한 전략적 행위자이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중국과 중동 지역의 경제적·외교적 관계가 밀접해져 온 덕분이다.

중동산 석유는 중국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2015년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데, 그중 거의 절반을 중동에서 들여왔다.

중국 자본주의에 중동이 중요한 이유가 석유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주요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자, 그 지역에 가장 많은 해외 투자를 한 나라다.

일대일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이르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도 중동은 중요한 길목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대에는 중국 자본들이 건설하고 있거나 투자한 철도, 항구, 고속도로, 발전소, 송유관, 신도시가 곳곳에 뻗어 있다.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를 따라 중국은 지난 10여 년 동안 알제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과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 등 중동에서 외교적 개입을 높여 왔다.

그리고 중동과 지척인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최초의 해외 기지를 세우는 등 중국은 또한 중동과 인도양 일대

에 자국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군사력을 주둔시키려고 모색하는 중이다. 물론 중동에 막강한 군사력과 동맹국들을 거느린 미국이 군사적 영향력 면에서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말이다.

올해 초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 개선을 중재함으로써 중동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다.

이렇게 중동에 걸린 경제적·지정학적 이해관계 때문에 중국 지배 관료는 중동 질서가 ‘안정’을 유지하기를 바라왔다. 그리고 이 점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데에도 반영돼 왔다.

두 국가 방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발 전부터 시진핑 정부는 ‘두 국가’ 방안을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법으로 지지해 왔다. 1967년 중동 전쟁 이전의 국경을 기준으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공존”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두 국가’ 방안은 인종 분리에 기초한 이스라엘 국가 인정을 전제로 한다. 그 방안하에서 팔레스타인인의 해방은 공상이다.

중국 정부가 ‘두 국가’ 방안 지지를 표방하는 것은 그 안을 명목상 지지하는 중동 정권들과 코드를 맞추는 한편, 이스라엘에 대한 ‘안전 보장’ 필요성도 인정해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외교적 책략이다.

10월부터 벌어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은 중국에 몇몇 이득을 주고 있다. 지난달 초 <파이낸셜 타임스> 수석 외교 칼럼니스트 기디언 래크먼은 이렇게 썼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모으는 데서 드러난 서방의 취약한 능력은 이제 미국의 이스라엘 지지에 개발도상국과 빈국들이 분노하며 더 손상됐다.”

중국은 미국이 중동의 새로운 전쟁에 발목 잡힌 상황으로 반사이익을 누리며, 이 전쟁을 세계가 미국 주도 질서에서 다극화된 세계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지배계급은 이 전쟁



최근 중국은 사우디-이란 관계를 중재하는 등 중동의 중요한 행위자가 됐다

이 장기화돼 자신들의 투자처이자 시장으로서 중동 자본주의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련 당사자들의 자제와 휴전을 촉구해 왔다.

지금 중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동정적인 듯한 태도를 취하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은 지지하지 않는다. 하마스의 10월 7일 기습에 대해 중국 정부는 지지를 표명하거나 변호한 적이 없다. 그들도 팔레스타인인의 무장 저항이 아랍 대중의 반란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2011~13년 아랍 혁명 때도 중국 지배계급은 혁명을 내심 우려했다. 중동의 기성 질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보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랬고, 이 혁명 물결이 중국에 미칠 영향도 걱정돼서였다.

2011년 11월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이집트에서 시위로 수십 명이 사망했음을 사실에서 지적하며 이렇게 썼다. “민주주의는 반란에서 시작될 필요가 없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중국 관료는 팔레스타인인이 아니라 중동의 부패하고 억압적인 정권들의 친구다.

중국과 이스라엘

중국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다. 그렇게 중국과 이스라엘 간의 경제적 관계는 상당히 가깝다.

냉전이 종식되고 오슬로 협정이 체결될 무렵부터 중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가까워졌다. 1992년 양국은 수교를 맺었고, 1990년대 중국은 제재를 우회하며 이스라엘과 거래해 서방의 군사 기술을 들여올 수 있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은 이스라엘의 농업, 기술, 건설, 벤처 기업 등에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다.

지난 5월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을 감시하는 데 쓰이는 중국 기업의 안면 인식 시스템이 이스라엘에 의해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서 쓰인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중국 공안도 위구르족을 통제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기술과 노하우를 연구하기도 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 중국은 이스라엘에 휴전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과 이스라엘의 경제적·지정학적 유대가 근본적으로 약화될 조짐은 없어 보인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업종 확대

열악한 조건은 규탄하되 유입은 환영해야 한다

임준형

정부가 내년도 신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37.5퍼센트 늘린 16만 5000명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도입 규모를 2021년 5만 2000명, 2022년 6만 9000명, 올해 12만 명으로 늘려 왔다.

또한 음식점업, 임업, 광업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허용 업종에 새로 추가했다. 일단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호텔·콘도업도 신규 허용 업종에 포함시킬지 정부가 12월에 논의할 예정이다.〈한국경제〉

정부는 인구 감소와 몇몇 업종의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이주노동자를 늘리려

한다.

동시에, 현재 40만 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5년 안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강력한 단속추방을 벌이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은 더 강화했다. 어렵게 변경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 권역 내에서만 옮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조치들은 억압적이며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한다.

주요 노조들은 이주노동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도입 확대에 반대하거나, 명시적 반대는 아니어도 늘어날 이주노동자를 환영하는지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이주노동자 증가가 내국인 일자리에 부정적인가?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한국노총은 업종 확대를,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는 도입 규모 확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인 노동자가 이주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공갈 갈취법’으로 매도하며 공격해 온 것 때문에 조합원들이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확대로 고용 불안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듯하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유입된다고 해서 내국인 일자리가 자동으로 주는 건 아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고용 위기를 크게 겪은 것은 IMF 위기와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직후였다. 당시는 이주노동자 유입이 는 시기가 아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이주노동자 수가 줄었지만 실업률은 올랐다.

이런 일부 기간 이외에 이주노동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실업률은 큰 변동이 없었다.

이런 사실들은 일자리 감소가 주로 경제 상황의 악화 때문이지 이주노동자 증가 때문이 아님을 보여 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저숙련 부문과 건설업에서는 이민 증가로 내국인 고용이 적잖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이

민 증가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서 내국인 건설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도 같은 연구에서 지적했다.

이주노동자의 한국 유입이나 사용자의 이주노동자 고용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주기적으로 단속추방을 벌이는데도 지난 몇 년간 미등록 이주민은 꾸준히 늘었다. 고용허가제로 오기 어려우면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 등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 와서 일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이주노동자의 고용·유입 제한 입장을 갖고 있거나 환영하지 않으면,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도 이주노동자를 단결해 함께 투쟁할 동료로 보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는 정부와 사용자가 내국인과 이주노동자를 이간질하게 쉽게 하고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 결국 이는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끌어내리는 압력이 된다. 이주노동자 유입에 반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내국인 노동자에게도 해로운 근시안적인 태도다.

고용과 임금 수준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저항하느냐에 따라 가장 크게 좌우된다. 정해진 몫이 있어서 이를 노동자들끼리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 몫을 줄이려는 사용자에 맞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열악한 곳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이주노동자 유입 막아야 한다?

한국노총은 “국내 일자리 질 개선과 이주노동자 처우개선이 먼저”라며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에 반대한다.

반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정부가 이주노동자 수는 빠르게 늘리면서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과 처우는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이주노동자를 조직해 싸우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업종 확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주장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유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과 조선업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에 반대한 바 있다. 금속노조도 조선업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에 반대했다.

이런 입장으로는 이미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조직하지만, 더 많은 이주노동자가 들어오는 것은 반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막는다고 그들이 열악한 일자리에서 고통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행이 막히면 그들은 다른 나라의 열악한 일자리로 가거나, 자국의 더 열악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더 나쁜 게는 실업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애초부터 미등록 신분으로 한국에 올 수도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유로 이주노동자 유입을 반대하는 것은 그들의 절

박한 필요와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든, 이주노동자든 투쟁을 통해서만 필요한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 노동자들 사이에 차이와 차별이 있고 이 탓에 분열 압력이 작용해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처지 개선을 위해 단결할 잠재력이 있다.

한국에서도 몇몇 금속 사업장에서 노조가 이주노동자 조직에 나서고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한 덕분에, 복수노조의 제약을 뚫고 노조 설립에 성공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주노동자와의 단결을 도모하는 것이 내국인 노동자에게도 이익인 것이다.

그러나 자연스레 단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투쟁적 활동가들은 노동계급 내 인종 간 단결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정부와 사용자들이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모는 것을 당연히 규탄하고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유입·고용되는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한다. 비록 임금과 노동조건이 열악한 부문에서 일하게 될 지라도 말이다.

그래야 노동계급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다.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는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서 단연 필수적인 요인이다.

이 글은 필자의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발제문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란: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에서 일부 원용해 썼다.

정부 여당의 산재 보상·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노동자 건강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냉혈한들

김승섭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산업재해 보상제도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려 한다. 기업주들은 정부·여당과 한 목소리로 개악을 촉구하고 나섰다.

매해 10만여 명이 산재를 당하고 2000여 명이 산재로 죽는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산재 추정 원칙' 제도(일부 질병에 대해 작업 기간과 위험 요소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가 부정 수급을 발생시킨다며, '산재 카르텔' 운운하며 산재 보상을 개악하려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산재 추정의 원칙은 대체로 산재로 인정돼 왔던 질병에 대해 산재 신청에서 승인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조금 간소화한 것뿐이다. 예컨대 산재 승인까지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보통 4~5개월, 직업성 암의 경우 여러 해가 걸리는데, 이 기간을 단축하고 노동자들이 져야 하는 산재 입증 책임의 일부를 완화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산재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 질병의 수도 제한돼 있고, 그 조건도 까다로워서 이를 충족하는 사례는 매우 적다.

오히려 산재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 질병의 종류를 대폭 확대하고 그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 중 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폐암에 걸려도 산재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

산재가 승인되면 노동자들은 휴업급여를 받는데, 임금의 고작 70퍼센트다. 기존 임금으로 생활이 빠듯한 노동자가 많은데 임금의 70퍼센트만 받으면 생활은 더 어려워진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산재 노동자들에게 '나이롱 환자'라고 말하는 것은 모욕이다.

게다가 일용직 건설 노동자의 휴업급여는 이보다도 더 적게 책정돼, 현장을 옮겨 일한 지 며칠 안 되는 경우 일급의 50퍼센트만 받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 치료도 마치지 못한 채 일하러 나가는 노동자가 많다.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산재 결정이 4~5개월 뒤에야 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다. 늦게나마 다행히 산재 결정이 나면 그제야 조금 안도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비급여나 특진료 등 꽤 많은 부분은 산재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 심지어 노동자가 계속 치료를 원해도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을 강제로 종결시켜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지금 '나이롱' 공격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들을 충분히 치료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산재 승인 기간 연장 등 다른 개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정부의 관심사는 오로지 기업주의 이윤 보전에 있다.

또 2년을 유예하겠다고?

또 윤석열 정부는 50인(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려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 실질 사용자나 원청 사용자의 책

임을 묻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안전 계획과 시스템을 만들지 않거나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로 대상을 한정하기 때문에 실제 이 법에 의해 처벌된 사업주는 거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법 위반 사건은 400건(2023년 9월말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는 83건에 불과하고, 검찰 기소는 25건에 불과하고, 불기소 5건에 대한 사유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민주노총).”

대부분 중대 산업재해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시행을 또 2년 유예하겠다는 것은 노동자가 계속 죽고 다치는 현실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 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법 적용 시점(2022년 1월 27일)을 2년 유예해 준 바 있다.

그런데 법 시행(2024년 1월 27일)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또다시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는 3가지 조건(정부의 사과, 사용자 단체가 2년 뒤 시행하겠다는 약속, 정부의 재정 지원)만 충족되면 2년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처음 약속도 안 지키는데 2년 뒤라고 시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여당과 민주당 모두 노동자의 건강과 목숨보다 기업주들의 이윤을 더 신경 쓰고 있다.

처우 개선, 출퇴근 열차 무료 이용(사내 복지) 보장!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서울역 농성에 들어 가다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 노동자들이 11월 28일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앞에서 처우 개선과 출퇴근 열차 무료 이용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한 데 이어, 12월 4일부터 철도공사가 책임지라며 서울역 농성을 시작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철도공사로부터 위탁업무 수행료를 받거나 주차장 등을 운영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이 업무는 애초 철도공사가 하던 것으로, 자회사 만들어 분리시켰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역무원, 매표, 철도 고객 상담, 주차 등 철도 운영에 꼭 필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럼

에도 자회사 노동자라는 이유로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고, 복지 수준도 열악하다.

더구나 인력이 부족해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심지어 무료 노동까지 강요받고 있다.

예컨대,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철도고객센터 상담사들에게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공휴일(유급휴가일)에 연차나 병가를 쓰고(무료로) 쉬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역무원들은 한 명이라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대체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주 52시간이 넘어 공짜

노동을 해야만 한다. 같은 이유로 어떤 역에서는 혼자 근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용역회사'처럼 '중간 착취'하는 자회사가 아니라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외치는 이유다.

한편, 원거리 출퇴근을 하는 본사 임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사측이 수억 원대의 사택을 제공해 왔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가 원거리 출퇴근을 하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열차 무료 이용(사내 복지)을 공격한 바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부정 승차범으로 몰리는데, 정작 코레일네트웍스 임원들은 스스로 편의를 누려 왔던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휴일 무료 노동을 강요하는 사측이 3년간 고위직 20명의 교육비로 2억 1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에 분개하고 있다.

청렴과 존중이 코레일네트웍스 사훈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적폐 경영진과 철도공사에 맞서 처우 개선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내자.

이재환



서평 | 《화석 자본》

마르크스주의로 본 화석연료 경제의 기원

안드레아스 말름은 스웨덴 룬드 대학에서 생태학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기후 운동가이다. 그는 2015~2018년 독일에서 벌어진 석탄 발전소 폐쇄 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기후 운동에 동참해 왔다. 《화석 자본: 증기력의 발흥과 지구온난화의 기원》(두번째테제, 2023)은 그의 대표작으로 2016년에 출판돼 아이작 도이처 상을 수상했다.

이 책은 자본주의와 화석 연료 경제의 기원에 대한 훌륭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이며 기후 운동가라면 누구나 읽어 봐야 할 필독서다.

말름은 화석 연료 경제가 시작된 19세기 초 영국에 주목한다. 바로 그때 그곳에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산업혁명이 선택한 첫째 에너지원은 흐르는 물이었다. 영국 면방직 공장의 기계는 흐르는 강물에서 물레방아를 통해 동력을 얻었다.

제임스 와트가 복동식 증기기관을 발명한 1784년 이후로도 수십 년 동안 수력은 증기기관에 비해 훨씬 저렴한 에너지원이었다. 1833년에 이뤄진 영국 정부의 공장 조사에서도 공장주들은 “수력이 훨씬 저렴하다”고 답했다.

“절대적인 용량, 운동의 균일함, 에너지 효율, 그 어느 측면에서도 기관은 수차를 압도하지 못했다. 실상은 차라리 그 정반대에 가까웠다.”

그러나 수력의 수많은 장점에도 자본가들은 숙련된 노동력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면 도시에 공장을 짓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알게 됐다.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대처(해고, 대체인력 투입 등)하는 데에도 노동력이 풍부한 도시가 유리했다.



화석 자본 — 증기력의 발흥과 지구온난화의 기원

안드레아스 말름 지음, 위대한 옮김
두번째테제, 708쪽, 38,000원

말름은 지하에서 캐낸 석탄이, 강에 인접해야 하는 수력과 달리 자본가들에게 “시공간적 자유”를 부여해 “도시로 가는 티켓”이 됐다고 지적한다.

당시 증기기관의 생산력은 수력에 한참 못 미쳤지만 자본주의적 경쟁 시스템과는 더 잘 어울렸다.

5장 ‘전환의 수수께끼’에서 말름은 당시 수력 엔지니어들이 여러 공장에 물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장치를 얼마나 훌륭히 설계했는지 보여 준다. 거대한 저수지와 수문, 수로는 당대 증기기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안정되고 강력한 동력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려 했을 때 자본가들은 전체 투자 비용 중 얼마를 분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투었다. 증기기관은 전제로 보아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경쟁 속에 있는 자본가들은 “남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한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다.”(1843년, 수력 엔지니어 로버트 톰)

이는 오늘날에도 자본가들이 경쟁 때문에 기후 위기를 멈출 진지한 조치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다.



중국 철강공장. 19세기 화석연료 경제가 시작된 영국 맨체스터에서와 똑같은 생산관계가 낳은 산물

요컨대, 말름이 보여 주고자 한 것은 자본가들이 자본주의적 경쟁 관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노동자들을 더 효율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화석 연료로 전환했다는 사실이다.

지배자들은 이를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포장했지만, 말름은 당시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보호하고(종종 기계 도입에 반대하며) 자신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격렬히 싸웠음을 보여 준다.

말름은 21세기에 들어 화석 연료의 최대 연소처가 된 중국에서도 당시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한다.

“맨체스터가 1840년대에 ‘세계의 굴뚝’이었다면, 21세기 초에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주로 세계적 이동성을 지닌 자본이 중국을 장악하여 자기 공장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 노동자들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은 도시 중심에 도달하기 위해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어본 사람들에게 말름의 책은 특별히 의미가 있을 듯하다. 말름은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에는 누구나 경험적으로 이해했을 법한 사실들을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

해할 수 있게 하려고 힘쓴 듯하다. 말름의 책과 함께 《자본론》 1권의 15장 기계와 대공업에 관한 장을 읽으면 특히 흥미로울 것이다.

말름은 일부 ‘마르크스주의자’의 “생산력 결정주의”를 비판한다. 그러나 말름 자신이 이 책에서 여러 차례 인용했듯이 마르크스 자신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말름이 인류세 개념을 일축하는 것이나 노동계급의 잠재력에 관해 회의론을 표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그 점이 이 책의 탁월함에 큰 흠이 되지는 않는다.

말름 자신이 소개한 1842년 영국 총파업의 경험은 21세기에도 재현될 수 있다. 패배의 경험과 약점이 있음에도 오늘날의 세계 노동계급은 여전히 화석 연료 산업을 중단시킬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화석 연료를 깨고, 자동차, 기차와 항공기를 몰고,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바로 전 세계의 남녀 노동자이다.

우리 모두의 임무는 그 잠재력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장호중

▶ 16면에서 이어짐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교원의 순직 인정 신청 17건 중 3건만 인정 받았다.” 일반직 공무원(27건 중 7건)보다 낮은 인정 비율이다.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이로 인한 고소·고발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등”도 순직 사유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이 여전히 “정서적 아동 학대”로 무분별하게 신고당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동 학대 신고가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1.6퍼센트에 불과하다.

재수사와 순직 인정 요구가 정당한 이유다.

어느 때보다 수사 기관을 강화하고 적극 활용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교사의 억울한 의혹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부실한 수사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

정부는 교권 보호 운운하지만, 정작 내년도 교권 보호 예산은 찔끔 늘렸고,

교육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교사 선발 규모도 축소해 버렸다.

11월 29일 교육부는 교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발표했다. 권위주의적 학생 통제를 늘리고, 학생의 권리를 학습권으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교권 보호를 일부 진상 학생·학부모 개인들의 문제로 축소·호도하는 것이다.

이는 교사에게 노동기본권도 보장하

지 않으며 교사·학생·학부모 모두를 입시 경쟁 교육 시스템의 제물로 만들어 온 정부와 교육 당국의 책임을 피해가는 것이다.

결국 경찰의 부실 수사는 정부의 이런 기초와 맞닿아 있다. 아주 당연한 책임조차 외면하는 꼴을 보면, 작은 개혁을 위해서조차 힘을 모아 단호하게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된다.

김문성



서이초 교사 사건 재수사와 순직 인정을 하라

‘전국교사일동’ 등 교원 단체들이 서울 서이초 사건 재수사와 자살 교사 순직 인정, 그리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교사 자살 이후 연인원 수십만 명의 항의 시위 운동을 석 달간 이끌었던 네트워크이다.

서이초 교사가 7월에 자살한 이후 거의 반년이 돼 가는데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국교사일동과 5개 교원단체(전교조, 교총, 대한초등교사협회, 서울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는 합동으로 12만 5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11월 말 국회(법 개정), 경찰청(재수사), 인사혁신처(순직 인정) 등에 전달하고 즉각 해결을 요구했다.

11월 14일 경찰은 학부모의 서이초 교사 괴롭힘 의혹에 혐의점이 없다며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가족과 교원단체들은 경찰 발표와 배치되는 여러 진술과 증거를 경찰이 무시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전국교사일동도 11월 29일 기자회견에서 경찰 수사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윗선이 민감하게 보고 있으니 빠른 종결을 희망한다며 유가족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유서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의 죽음을 개인사로 축소하고자 하였고 또한 유가족이 요구하는 수사 정보 공개도 미루고 있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직후 얼마 되지 않은 8월에 이미 경찰은 학부모의 괴롭

힘 혐의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학부모들이 교사 개인의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의혹도 풀리지 않았다. 경찰은 학부모가 학교로 건전화로 교사 개인 핸드폰으로 착신 연결된 것을 고인이 착각했다고 설명해왔는데, 최근 경찰은 그것이 추정이라고 밝혔다. 사실 전화를 건 사람의 핸드폰만 조사해서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을 경찰은 단정하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8월에 교육부와 합동조사를 했던 서울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도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당시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모두 자신들은 학부모 등에 대한 강제수사권이 없으므로 경찰 수사에서 이 의혹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무엇보다 경찰은 수사 종결 발표 후 유가족이 신청한 수사 기록 공개 요구를 20일 동안 무시하고 있다. 경찰 발표가 진실이라면, 공개를 피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말이다.

경찰은 수사 기록을 공개하려면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이유를 댔는데, 유가족 측은 그 제3자가 가해 의혹을 받는 학부모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그 학부모는 부부의 직업이 각각 경찰(아내)과 검찰 수사관(남편)이다.

경찰 수사가 이대로 종결되면 유가족은 평생 가족이 죽은 이유도 모른 채 살아가야 한다.

수사가 어이없이 종결되면서 고인의 순직 인정도 기약이 없어졌다.

11월 30일 기자회견에서 교총이 밝힌

▶ 15면으로 이어짐



경찰의 부실 수사는 정부와 교육 당국의 본질적 책임을 축소·호도하는 것이다

12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

이스라엘은 인종 학살 즉각 멈춰라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12월 9일(토) 오후 2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서울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아랍어-한국어 통역 제공
집회 후 도심 행진
주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사람들
문의: 010-7550-2131 people.freepalestine@gmail.com

※후원 계좌: 국민은행 694701-01-227958(예금주 백은진)보내 주신 후원금은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개최를 위해 사용됩니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57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온라인 토론회 (구약성경)

유대교 경전을 이용한 시온주의의 거짓말

12월 13일(수) 오후 8시

발제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장자 국제연락간사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마르크스주의의 방법),
(러시아 혁명: 희망과 좌절) 등의 저자

참가신청
bit.ly/1213-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